

# 독도 체험 발표 대회 보고서

##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독도”



노성민, 신혜성, 이종후, 이준호, 홍승혁

## 1. 독도 역사 조사 보고서-홍승혁

- 1.1. 삼국시대: 신라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
  - 1.1.1. ‘독도’는 우산국의 영토였는가?
- 1.2. 고려시대: 우산국의 붕괴
- 1.3. 조선 전기: 세종실록지리지 오십 쪽 셋째 줄
- 1.4. 조선 후기: 독도를 지킨 어부, 안용복
- 1.5. 대한제국: 일본의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
- 1.6. 해방 전후: 국제 사회가 인정한 대한민국 독도
- 1.7. 현대: 계속되는 일본의 야욕, 우리의 독도 수호 노력

## 2. 독도의 법적 탐구-이종후

- 2.1.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 2.2.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SCAPIN) 제 677호
- 2.3. 태정관 지령

## 3. 독도의 외교적 현황-신혜성

- 3.1. 독도와 일본의 분쟁
- 3.2. 한국의 독도 관련 대외적 태세
- 3.3. 타국의 독도 관련 외교적 태세

## 4. 독도의 경제, 생태적 가치-노성민

- 4.1. 독도의 경제적 가치
  - 4.1.1. 독도 주변의 황금어장
  - 4.1.2. 독도의 지하자원
  - 4.1.3. 독도의 관광 산업
- 4.2. 독도의 생태적 가치
  - 4.2.1. 화산 지형의 보고
  - 4.2.2. 생태계의 보고

## 5. 독도의 정치적 가치-이준호

## 1. 독도 역사 조사 보고서-홍승혁

### 1.1. 삼국시대: 신라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

역사서 속에서 독도는 1145년 『삼국사기』 제4권 신라본기에 처음 등장한다.

지증마립간 13년(서기 512) 여름 6월, 우산국(于山國)이 복종하여 해마다 토산물을 공물로 바치기로 하였다. 우산국은 명주(溟州)의 정동쪽 바다에 있는 섬으로 울릉도(鬱陵島)라고도 한다. 땅은 사방 백 리인데, 지세가 험한 것을 믿고 항복하지 않았다.

이찬 이사부(異斯夫)가 하슬라주(何瑟羅州) 군주가 되어 말하기를 “우산국 사람은 어리석고도 사나워서 힘으로 다루기는 어려우니 계책으로 복종시켜야 한다.”라고 하고, 바로 나무로 사자를 가득 만들어 전함에 나누어 싣고 그 나라 해안에 이르렀다.

이사부는 거짓으로 말하였다.

“너희가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이 사나운 짐승을 풀어 밟아 죽이겠다.”

그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즉시 항복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또한, 『삼국사기』와 함께 삼국시대를 다룬 대표적인 역사서로 꼽히는 『삼국유사』에서도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이 묘사되어 있다.

아슬라주(阿瑟羅州)[지금의 명주(溟州, 강릉)이다.] 동쪽 바다에 순풍이 불면 이틀만에 이를 수 있는 거리에 우릉도(于陵島)[지금은 우릉(羽陵)이라고 한다.]가 있었는데, 섬 둘레가 26,730보였다. 섬에 사는 오랑캐들은 바닷물이 깊은 것을 믿고 교만하고 오만하여 신하 노릇을 하지 않았다. 왕은 이찬 박이종(朴伊宗)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토벌하도록 하였다. 박이종은 나무로 사자를 만들어 큰 배에 싣고 가서 그들을 위협하여 말하였다.

“항복하지 않으면 이 짐승을 풀어놓겠다.”

그러자 섬 오랑캐들은 두려워서 항복하였다. 왕은 박이종에게 상을 내리고 아슬라주의 장관으로 삼았다.

-『삼국유사』 지철로왕(지증마립간)

이 두 역사서의 기록을 정리하면, 512년(지증마립간 13년) 6월, 이찬에 올라 있던 이사부가 왕명을 받아 나무로 사자를 만들어 위협하는 계책을 사용하여 우산국을 복속시킨 일을 통해 독도가 한반도 역사에 처음 들어왔다고 할 수 있다.

#### 1.1.1. ‘독도’는 ‘우산국’의 영토였는가?

우산국이 울릉도만을 뜻하는지, 울릉도와 독도 모두를 포함하는지 논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독도 또한 우산국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실제로 『세종실록 지리지』(1432), 『동국여지승람』(1481),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숙종실록』(1696), 『만기요람 군정편』(1808) 등 각종 고문헌과 고지도에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모두 옛 “우산국” 영토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지지(輿地志)에 이르기를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皆) 우산국 땅이며, 우산도(于山島)는 왜인들이 말하는 송도(松島, 마츠시마)이다.

-『만기요람 군정편』(1808)

또한 일본 외무성 등 일부 단체들은 ‘우산도’가 오늘날의 ‘독도’라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의 초기 카톨릭 신부 김대건이 1846년 프랑스로 표기한 ‘조선전도’(Carte de la Corée)에서 “독도”와 ‘Ousan’(우산)을 병기하는 등 한국과 일본의 다수의 고지도가 ‘우산도’와 ‘독도’가 같은 섬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1.2. 고려시대: 우산국의 붕괴

고려시대는 우산국이 붕괴된 시기였다. 우산국은 1018년(현종 9)~1022년(현종 13)에 동북여진(東北女眞)의 침략을 받아 그 존립 기반이 붕괴되었다. 현종 때 여진족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우산국뿐만 아니라 동해안 일대의 19읍에 걸칠 만큼 광범위했는데, 이때 해당 군현 주민들에 대한 조세 감면 등의 조치가 단행되었으나, 우산국의 경우는 조세 감면의 조치에 관한 기록이 없다. 이것은 우산국이 고려의 군현체계 속에 포함되지 않고 조세와 역역을 부담하지 않는 독립적인 위상을 갖고 있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여진족의 침략으로 인해 우산국은 더 이상 자립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주민 대다수가 고려에 망명할 정도였으며, 농기구 지원의 명목이긴 하나 고려의 관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현종 때를 마지막으로 우산국이란 명칭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 1.3. 조선 전기: 세종실록지리지 오십 쪽 셋째 줄

태종 시기, 조선 조정은 울릉도와 독도의 운영을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 한가운데 있어, 국가의 권력을 행사하기에는 행정 부담이 크

고, 그렇다고 버려두면 왜구들의 침략 전초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우의정 한상경(韓尙敬), 육조(六曹)·대간(臺諫)에 명하여, 우산(于山)·무릉도(武陵島)의 주민[居民]을 쇄출(刷出)하는 것의 편의 여부를 의논케 하니, 모두가 말하기를, "무릉(武陵)의 주민은 쇄출하지 말고, 오곡(五穀)과 농기(農器)를 주어 그 생업을 안정케 하소서. 인하여 주수(主帥)를 보내어 그들을 위무(慰撫)하고 또 토공(土貢)을 정함이 좋을 것입니다."하였으나, 공조 판서 황희(黃喜)만이 유독 불가하다 하며, "안치(安置)시키지 말고 빨리 쇄출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쇄출하는 계책이 옳다. 저 사람들은 일찍이 요역(徭役)을 피하여 편안히 살아왔다. 만약 토공(土貢)을 정하고 주수(主帥)를 둔다면 저들은 반드시 싫어할 것이니, 그들을 오래 머물러 있게 할 수 없다. 김인우(金麟雨)를 그대로 안무사(按撫使)로 삼아 도로 우산(于山)·무릉(武陵) 등지에 들어가 그곳 주민을 거느리고 육지로 나오게 함이 마땅하다."

-『태종실록』 태종 17년(1417년) 2월 8일 을축 1번째 기사

태종은 황희의 의견을 따라 '무릉등처안무사'를 보내 우산·무릉도의 주민을 모두 육지로 데려오기로 결정했다. 이후 조선은 두 섬에 대하여 계속 쇄환(刷還)정책을 유지했다. 그러나 부역과 조세를 피하고자 동해 해안가 사람들은 물산이 풍부하고 농사가 잘 되는 우산·무릉도로 끊임없이 들어갔다. 조정에서 관리를 보내 감독하는 사업 역시 반복되었다.

실제로 세종 대에는 강원도 평해 사람 김을지 등 28명이 섬에 도망가 살면서 몰래 작은 배를 타고 평해군 구미포로 왔다가 발각되었다. 이에 '무릉등처안무사'인 김인우가 군인 50명을 거느리고 가서 남녀 20명을 수색해 잡아왔다. 또한 성종 대에는 우산·무릉도를 무릉도원으로 인식하여 한때 '요도(蓼島)' '삼봉도(三峰島)'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왜구 침탈 위험이 줄어들자 관권의 횡포를 피해 많은 주민들이 무릉도원을 찾아 나섰다. 이에 성종은 삼봉도 경차관에 박종원을 임명하여 주민들을 쇄환해 나오도록 명한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강원도 울진현 부분에는 독도(우산도)와 울릉도(무릉도)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다.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2섬이 현의 정동(正東) 해중(海中)에 있다. 【2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 우산국(于山國), 또는 울릉도(鬱陵島)라 하였는데, …의종(毅宗, 고려의 제 18대 왕) 13년에 심찰사(審察使) 김유립(金柔立) 등이 돌아와서 고하기를, "섬 가운데 큰 산이 있는데, 산꼭대기로부터 동쪽으로 바다에 이르기 1만여 보이요, 서쪽으로 가기 1만 3천여 보이며, 남쪽으로 가기 1만 5천여 보이

요, 북쪽으로 가기 8천여보이며, 촌락의 터가 7곳이 있고, 간혹 돌부처·쇠북·돌탑이 있으며, 멧미나리[柴胡]·호본(蒿本)·석남초(石南草) 등이 많이 난다." 하였다. 우리 태조(太祖) 때, 유리하는 백성들이 그 섬으로 도망하여 들어가는 자가 심히 많다 함을 듣고, 다시 삼척(三陟) 사람 김인우(金麟雨)를 명하여 안무사(安撫使)를 삼아서 사람들을 쫓아내(刷出)하여 그 땅을 비우게 하였는데, 인우가 말하기를, "땅이 비옥하고 대나무의 크기가 기둥 같으며, 쥐는 크기가 고양이 같고, 복숭아씨가 되[升]처럼 큰데, 모두 물건이 이와 같다." 하였다. 】

-『세종실록』 153권, 지리지 강원도 삼척 도호부 울진현

조선 정부는 1481년에 조선의 국토 해설서로 동국여지승람을 편찬 발간했고, 1531년에는 이를 증보해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발간했는데, 이 동국여지승람과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독도(우산도)와 울릉도는 조선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동해 가운데 2개 섬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무릉(武陵)이라고도 하고 우릉(羽陵)이라고도 한다. 두 섬이 고을 바로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세 봉우리가 곧게 솟아 하늘에 닿았는데 남쪽 봉우리가 약간 낮다. 바람과 날씨가 청명하면 봉 머리의 수목과 산 밑의 모래톱을 역력히 볼 수 있다. 순풍이면 이틀에 갈 수 있다. 일설에는 우산·울릉이 원래 한 섬으로서 지방이 백리라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5

#### 1.4. 조선 후기: 독도를 지킨 어부, 안용복

조선이 임진왜란의 전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1625년(광해군 17년, 1618년이라는 설도 있다),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는 오야와 무라카와 두 가문에 죽도(울릉도) 도해면허를 내준다. 또 오오다니가는 1656년경 막부로부터 송도(우산도·독도) 도해면허도 획득했다. 이 도해면허는 일본 국경을 넘어 '외국'에 가서 활동할 수 있는 통상면허장이었다.

한편 1693년, 막부로부터 도해면허를 받고 울릉도와 독도 인근에서 무분별한 조업을 일삼던 일본의 오야와 무라카와 가문의 어부들과 조선의 안용복, 박어둔 등 40여명의 어부들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일본으로 납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용복은 인질이 되었지만 대담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했다. 그는 조선 영토인 울릉도에 조선 사람이 갔는데 억류하는 까닭이 무엇이냐며 호키 주 태수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안용복의 거세고 논리적인 반발에 밀린 태수는 그의 주장을 문서로 작성해 막부에 판단과 신병 처리를 물었다.

그 해 5월 막부는 안용복 등을 나가사키로 이송해 돌려보내라고 지시하면서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서계를 써주게 했다. 이것은 17세기 무렵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가 자신의 영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매우 중요한 증거다.

9월 초 안용복은 대마도에 인계되었고 50일 정도 억류된 뒤 사신 타다 요자에몽을 따라 부산 왜관으로 송환되었다. 그러나 그는 왜관에서도 40일 넘게 갇혀 있다가 12월에야 동래부사에게 인도되었다. 이후 그와 박어둔은 허가 없이 월경한 죄목으로 각각 곤장 100대와 80대를 맞았다.

1694년(숙종 20) 4월 갑술환국으로 남구만·윤지완 등 소론 정권이 들어선 뒤 조선의 대일노선은 강경책으로 바뀌었다. 조선 조정은 “일본인들의 울릉도·도해 및 채어(採漁)를 금지한다”고 결정했고(1694년 8월), 삼척첨사 장한상을 보내 울릉도를 수색케 했다(같은 해 9월 10일~10월 6일). 장한상은 돌아와 [울릉도사적]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 아득한 바다에 있는데, 크기는 울릉도의 3분의 1이며 거리는 300리 밖에 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 뒤 1년 넘게 조선 조정은 일본 막부를 대행한 대마도와 울릉도·독도의 영유권과 어업권을 둘러싸고 격론을 벌였다. 그 결과 1696년(숙종 22) 1월 일본 막부는 울릉도·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일본 어민의 도해와 어업 활동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대마도가 서계 접수를 미루면서 일본 어부들의 조업 활동이 계속되자 1696년 3월 안용복은 조선 어민을 대거 이끌고 울릉도로 갔다. 울릉도에 도착했을 때 일본 어민들은 예전처럼 조업하고 있었다. 안용복은 그들의 월경죄를 꾸짖고 호키 주로 갔다. 그는 ‘울릉우산양도감세관’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정식 관원처럼 차린 뒤 호키 주의 수석 가로 아라오 오오카즈와 담판했다. 안용복은 대마도주의 죄상을 고발하는 문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호키 주에서는 그것을 막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조선과 일본의 통교를 담당하던 대마도가 막부의 연락으로 안용복의 입국과 직소(규정된 절차를 밟지 않고 상급 관청에 직접 호소함) 사실을 알게 되고, 대마도에서는 안용복의 고소장을 물리치고 그 일행을 표창민으로 처리해 자신들을 거쳐 송환하도록 막부에 요청했다. 그 결과 안용복 일행은 목표했던 울릉도·독도의 조선 영속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1696년 8월에 조선으로 송환되었다.

막부의 결론은 1696년 1월에 이미 나와 있었지만 조선은 1697년에야 그 사실을 알았고, 이듬해 4월 막부의 결정을 확인한다는 서계를 회신했다. 석 달

뒤인 7월에 막부는 이 서계를 인정하고 그 사실을 이듬해 1월 대마도에 알렸다. 이로써 안용복 사건을 발단으로 불거진 울릉도·독도의 조선 영속과 어업권을 둘러싼 분쟁은 6년여 만에 일단락되었다.

1770년 영조의 명에 의해 조선의 문물제도를 기록한 관찬서인 『동국문헌비고』 여지고는 우산도와 독도가 같은 섬임을 명시했다.

우산도(독도)와 울릉도…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이다...「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다.

-『동국문헌비고』 「여지고」

1808년 왕명에 의해 편찬되어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의 조선왕조의 재정과 군정에 관한 내용들이 집약된 『만기요람』 군정 편에도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 땅이며,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송도(松島)이다.

-『만기요람』 「군정편 4」 해방 동해조

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1849년,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쿠르 호가 지금의 독도를 측량하여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라고 명명했다.

그로부터 20여 년 후, 일본에서 1868년 1월 새 메이지 정부가 수립되자, 일본 새 정부의 태정관(총리대신부)과 외무대신은 1869년 12월 외무성 고관들을 조선에 파견하면서, 14개 항목에 대한 내탐조사를 훈령했다. 그 가운데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부속으로 되어있는 시말”을 조사해오라는 훈령 항목이 있다. 이 사실은 일본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과 외무성이 1869년 당시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가 조선부속령임을 잘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에 대한 외무성 고관들의 내탐보고서가 1870년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이고, 이 내탐보고서는 1930년대에 간행한 일본외교문서 제3권에 수록되어 있다.

1877년, 일본의 최고 행정기구 태정관은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령이 아니라는 「태정관지령」을 내렸다. 일본 내무성은 1876년 근대적 일본 지적도를 작성하기 위해 각 현에 자기 현의 지적도를 작성해 보내라고 훈령했는데, 시마네현에서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를 시마네현에 포함할지 여부를 질문했다. 일본 내무성은 약 5개월 간의 조사 결과 1896년 1월 도쿠가와 막부의 결정 이래 울릉도와 그 외 1도(독도, 송도)는 조선 영토이고 일본과는 관계없는 땅임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영토문제는 태정관이 최종결정할 중대사항이라고 보고, 태정관 우대신 이와구라에게 울릉도(죽도)와 그 외 1도(독도, 송도)의 지



적편찬에 관한 질문서를, 1696년 1월 도쿠가와 막부의 결정서 등과 그 외 1도(송도)가 독도(松島)임을 설명하는 부속문서를 붙여, 태정관의 최종 결정을 요청했다.

태정관은 내무성의 질의서를 재검토한 결과, 1693년 조선인(안용복)의 입도 이래 도쿠가와 막부와 조선국 사이의 외교문서 왕복 후 울릉도(죽도)와 그 외 1도(독도, 송도)는 일본과의 관계가 없는 조선 땅임이 명백히 되었다고 재확인했다. 태정관은 1877년 3월 20일자로 “품의한 취지의 울릉도(죽도)와 그 외 1도(독도, 송도)는 일본과는 관계없음을 심득(마음에 익힐 것)할 것”이라는 요지의 훈령을 내무성에 내려 보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이고 일본영토가 아님을 명백히 했다.

1882년에는 고종이 울릉도, 독도를 조사하기 위해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을 보내 울릉도를 검찰하게 했다.

울릉도에는 근래에 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무때나 왕래하면서 제멋대로 편리를 도모하는 폐단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송죽도와 우산도는 울릉도의 곁에 있는데 서로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또 무슨 물건이 나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 이번에 그대가 가게 된 것은 특별히 가려 차임한 것이니 각별히 검찰하라. 그리고 앞으로 읍을 세울 생각이니, 반드시 지도와 함께 별단에 자세히 적어 보고하라

-『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1882년) 4월 7일 임술 1번째 기사  
그러나 이규원은 고종의 의견에 반박하며.

우산도는 바로 울릉도이며 우산(芋山)이란 바로 옛날의 우산국의 국도(國都) 이름입니다. 송죽도는 하나의 작은 섬인데 울릉도와 떨어진 거리는 30리(里)쯤 됩니다. 여기서 나는 물건은 단향(檀香)과 간죽(簡竹)이라고 합니다.

-『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1882년) 4월 7일 임술 1번째 기사  
고종 역시 확신에 찬 근거로 다시 명령을 내린다.

우산도라고도 하고 송죽도라고도 하는데 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실려있다. 그리고 또 혹은 송도·죽도라고도 하는데 우산도와 함께 이 세 섬을 통칭 울릉도라고 하였다. 그 형세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라.

-『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1882년) 4월 7일 임술 1번째 기사  
이는 고종이 독도의 위치 등 독도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갖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조선 정부는 쇄출정책을 폐기하고 울릉도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해 1883년에는 개화파의 우두머리 김옥균을 동남제도개척사로 임명해 사람을 이주시키고 울릉도의 일본인들을 쇄환했다.

### 1.5. 대한제국: 일본의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대한제국 영토로 서양국제법을 참조하여 세계에 공표했다. 울릉도에 일본인들이 불법 입도하여 거주하기 시작하고 일본 정부도 이를 방조하자, 대한제국은 1900년 6월 내부 조사관 우용정, 부산 해관 세무사 프랑스계 영국인 라포트(E. Laporte)와 일본인 관리 주 부산 일본영사관 부영사 아카츠키 등으로 구성된 “국제조사단”을 울릉도 현장에 파견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케 했다. 조사단의 보고를 받은 후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로 지방관제를 개정해, 종래 강원도 울진현에 속했던 울릉도와 독도를 이번에는 독립시켜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를 “울도군”으로 격상시키고, 울도군의 관할지역을 울릉도와 죽도(죽서도)와 석도(石島, 獨島)로 법정했다. 그리고 이 지방관제 개정 사실을 중앙정부의 관보 1900년 10월 27일 자에 국제고시했다. 이 때에 일본 측은 어떠한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도 없었다.

이 때 독도를 종래의 명칭 ‘우산도’로 호칭하지 않고 “石島(독도, 獨島)”로 표기한 것은 공도정책이 폐지되어 1883년부터 합법적으로 들어온 울릉도민들이 사투리로 돌을 “독”이라고 발음하여 독도를 돌섬이라는 뜻의 지방사투리로 “독섬”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1905년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령으로 편입했다. 일본이 1904년 러·일전쟁을 일으키고 독도에 일본해군의 망루를 설치하려고 계획하던 중, 일본 시마네현 어업가 나카이가 한국 정부에 독도사용권 대부 청원서를 제출하려 하자, 일본정부는 이를 영토편입 청원서로 바꾸어 일본정부에 신청하게 하고 이를 승인하는 형식을 취하여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하여 다케시마(竹島)라는 명칭을 붙인다는 결정을 했다.

이 때 일본정부가 주장한 것은 독도에 대해 “다른 나라가 이 섬(독도)을 점유했다고 인정할 형적이 없다”고 하여 독도가 임자없는 “무주지(無主地)”라고 주장해 전제한 것이다. 따라서 독도가 1905년 1월에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유주지(有主地)임이 증명되면, 이 “무주지 선점론”에 입각한 일본 정부의 독도영토편입 결정은 국제법상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이다.

독도는 512년 이래 한국영토로 존속해왔으므로,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섬”이었다. 일본 정부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잘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실제로 일본의 1905년 내각결정에 앞서 일본 내무성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 “우산도”라고 처음에는 반대의견을 진술했다.

일본정부는 한국정부 몰래 독도를 비밀리에 침탈하는 내각회의 결정을 했으나 이를 관례대로 중앙정부의 관보에 고시하지 못해 당시 국제법의 영토편입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왜냐하면 당시 도쿄에는 주일본 한국공사관이 활동하고 있어서, 중앙 관보에 고시하면 이를 알게 되는 한국공사관이 즉각 항의하여 독도 영토편입이 무효화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일본정부는 약 1개월 가까이 고심하다가 이를 시마네현의 현보에 1905년 2월 22일자로 고시했다. 왜냐하면 시마네현 현보는 시마네현 지방공무원의 내부자료이므로 한국 정부가 이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시마네현 지방신문에 보도더라도 주한 일본공사관이나 한국인들이 구독하는 신문이 아니므로 독도 침탈의 사실을 비밀에 쌓아 둘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1905년 연말까지도 일본 정부의 독도침탈 사실을 알 수 없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독도침탈결정 사실을 안 것은 1906년 3월 28일이었다. 울도군수 심흥택은 이를 알게 되자 「본군 소속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되었다고 일본인들이 주장한다」고 강원도 관찰사에게 보고했고, 강원도 관찰사는 중앙정부에 보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 내무대신은 즉각 독도영토침탈을 단호하게 부정하여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하는 주장은 전혀 이치가 없는 주장이고 심히 경악할 일이다”고 항의했다. 의정부 참정대신(총리대신서리)은 “일본의 독도 영지 운운은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강력히 항의하고, 일본인의 동태를 다시 보고하도록 훈령했다.

그러나 한국 중앙정부의 이러한 항의는 일본 정부에 외교문서로 발송되지 못하고 서류만 규장각에 보관되었다. 일본이 1905년 11월 18일 을사늑약으로 한국 정부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고, 1906년 1월부터는 일제 통감부가 한국정부의 외교권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항의 사실은 당시 한국의 주요 신문인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에 보도되었다. 예를 들어, 1906년 5월 1일자 대한매일신보는 ‘무변불유(無變不有)’라는 표제로 “독도를 칭하여 말하기를 일본속지라 한” 것은 ‘심히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한 내부의 지령문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식인들도 황현의 매천야록(梅泉野錄)에서 일본의 독도침탈에 항의했다.

#### 1.6. 해방 전후: 국제사회가 인정한 대한민국 독도

1945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에 항복한 이후 도쿄에 설치된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일본이 이웃나라를 침략하여 빼앗은 모든 영토들을 반환하

는 작업을 시작했다.

연합국최고사령관은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SCAPIN) 제677호를 발표해 한반도 주변의 제주도·울릉도·독도(리앙쿠르 도) 등을 일본의 주권에서 제외해 한국에 반환했다. 이 연합국의 결정은 아직도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다.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뒤이어 1946년 6월 22일 연합군 최고사령관지령(SCAPIN) 제1033호를 선포해 일본 어부들이 독도와 그 12해리 수역에 접근하는 것을 엄금하여,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거듭 명백히 했다.

1950년, 연합국은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에서 독도를 “대한민국의 완전한 영토”임을 재확인했다. 연합국은 1952년에 일본을 재독립시키기로 하고, 이에 앞서 체결해야 할 ‘평화(강화)조약’의 사전 “준비”로 1950년에 연합국의 구 일본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를 합의 작성했다.

이 합의서 제3항에서 “연합국은 대한민국에게 한반도와 그 주변의 한국의 섬들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이양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섬들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했다.

1951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면서 연합국과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했다.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한국의 3천여 개의 도서 가운데 예시에 불과하며,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일본은 연합국의 대일본평화조약 체결과정에서 한국영토로 확인된 독도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맹렬한 로비를 했으나 결국 실패했으며, 연합국은 연합국의 합의서에 따라 독도를 한국 영토로 그대로 두고, 일본 영토에서 제외했다.

일본이 1952년 4월 28일 재독립한 1개월 뒤인 1952년 5월 25일에 일본 마이니치 신문사가 일본 외무성의 도움을 받으며 대일본평화조약 이라는 616쪽의 해설서를 발행했는데, 그 첫 장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승인받은 일본영역도를 게재하면서, 사실대로 독도를 일본에서 제외해 한국에 속하게 되었음을 명백하게 표시했다.

한국 정부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맥아더 라인(1945년 9월 미국 극동군 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가 일본 주변에 선포한 해역선. 이 선부터 근해 어업은 일체 금지되었다.)이 소멸되자 일본 어선들이 한국의 영해를 침범해 해양 자원을 도둑질할 것을 우려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평화선 선언을 발표해 독도를 보호하고, 인근 해역을 침범하는 일본 어선들을 모두 나포하며 강한 대처를 보였다.

### 1.7. 현대: 계속되는 일본의 야욕, 우리의 독도 수호 노력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선언 이후에도 1954년 독도에 등대를 설치하고, 1981년 故 최종덕 씨를 독도 주민등록에 등재했으며,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하고 2005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2005년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하는 등 독도 침략의 야욕을 아직까지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독도는 역사 속에서 언제나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였으며, 앞으로 일본의 만행이 지속되더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 2. 독도의 법적 탐구-이종후

독도에 관한 법령은 총 38개, 그중 독도를 직접 언급하는 법령은 12개

문화재보호법상의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로서 대한민국 법의 보호를 받는 상태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상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설정

도서 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정 도서 지정

● 특정 도서: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 생태계가 우수하여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국유재산법상 행정 재산

자연공원법상 지질 공원

이 외에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등 독도에 관한 법률이 많이 존재한다. 법률 외에도 조례, 명령, 규칙 등 독도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들이 존재한다.

일본의 독도 관련 법령(조사하고 연구해야 하는 이유-독도에 대한 영토 주장을 강화하고 일본의 영토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법뿐 아니라 일본의 관련 법들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음)

일본의 법령에 관한 법령 중 죽도(竹島)에 관한 법령은 7개 정도로 38개인 대한민국에 비교해서는 적은 수치이다.

공직선거법 시행 규칙, 국세조사 시행 규칙, 영해 및 접속 수역에 관한 법률 등

다음과 같은 법들은 모두 죽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전제로 시행되고 있는 법이다.

일본의 현행법 중 竹の島(죽도와 같은 의미)와 관련된 법령(이 역시 독도와 관련됨)은 2개 정도가 존재하는데, 이 법령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전개하고 있다. 이 2개의 법령은 일본 측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직접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독도가 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인 근거

### 2.1.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와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를 포기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 2.2.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SCAPIN) 제 677호

독도를 일본의 통치, 행정 범위로부터 제외하였다.

## 2.3. 태정관 지령

일본 메이지 정부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문서이다.

### 국제 사법 재판소와 독도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제적으로 법적인 분쟁을 해결해주는 곳이다. 최근 일본은 더욱 심화하는 독도의 영토 분쟁 문제를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절대로 독도 문제를 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다.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제안에 응할 필요가 없다. 또한,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관들이 모두 과거 제국주의 국가 출신이라는 점과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봤을 때 국제 역학, 국제법상 일본에 밀린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 선택이다.

### 3. 독도의 외교적 현황-신혜성

#### 3.1. 독도와 일본의 분쟁

- 현재 독도의 상황 : 독도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동해에 위치하고 있고, 동도(東島)와 서도(西島)를 중심으로 주변의 암초 등을 포함한 총면적은 0.188 km<sup>2</sup>이며, 현재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하에 있다.

독도 분쟁은 20세기 이전, 독도에 대한 지배 및 관할을 어떻게 봐야하는지에 대한 역사 논쟁과 연결되어 있다. 대한민국 측은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역사적 문헌을 인용하거나 고지도에 기록된 우산도 등을 근거로 하여,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이며 20세기 이전부터 한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측은 우산도가 울릉도, 관음도, 죽도 또는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고 주장하며, 우산도가 독도라는 한국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또한 20세기 이전의 한국의 독도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역사 기록에 나오는 독도는 그 명칭이 여러이었고, 변화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들을 확인하는 데에는 난해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한민국은 우산도를 독도, 일본은 독도가 아닌 섬으로 정의하면서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고, 일본해(동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내용을 담은 2018 외교청서를 각의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점점, 일본은 독도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움직임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한국은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3.2. 한국의 독도 관련 대외적 태세

현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 견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습니다.”



### 3.3. 타국의 독도 관련 외교적 태세

외국인들은 보통 "한국이랑 일본 사이에 무슨 섬 갖고, 둘이 싸우고 있다."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이 문제에 강 건너 불구경처럼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며, 일본과 영토 분쟁 문제가 얽혀 있는 중국, 대만, 러시아 정도만이 암암리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CIA에서 발간하는 월드 팩트 북에서 독도는 '리앙쿠르 락스(Liancourt Rocks)'로 실려 있으며, 한국에서 1954년부터 점유한 이래 영토 분쟁 중이라고 적혀있다. 이는 현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립적인 시각이지만, 1900년대 이전의 한국의 독도 점유를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한국 측에 불리한 의견이기도 하다. 미국에게 한국과 일본은 모두 정치 및 외교적으로 중요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편만 들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 관계를 중요시해야 하는 관계로 어중간한 대응인 것은 사실이며, 현실에서는 세계가 독도를 영유권 분쟁이라고 인식하는 게 당연한 인식이다.

일부 사람들의 경우 '우리 땅이 당연하니까 그냥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승소해 버리면 논란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일본이 원하는 것이다. 일단, 당연히 한국 영토인 독도가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분쟁 지역으로 인식되어있는데, 국제사법재판소까지 끌고 간다면 한국이 직접 분쟁 지역이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일본 영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게다가 현재 일본인 재판관이 소속되어있어서 한국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도 없다. 쉽게 생각하면, 일본이 미쳐서 갑자기 서울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할 시 그냥 무시하는 것과 재판까지 끌고 가는 것 중 무엇이 현명한 대처일지 생각해보자.

한국은 보안상 이유로 서버가 국내에 있는 회사에만 지리 정보를 제공할 뿐 해외로는 지도 데이터를 반출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막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글, 애플 등의 외국 지도 제작 회사들이 일본이나 중국의 지도 데이터를 따르기 때문에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는 일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것도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2008년 7월 14일 미국에서는 독도를 한국 영토에서 분쟁 지역으로 표기를 바꾸었다. 이에 따라 표기를 리앙쿠르 암(岩)으로 바꾸려 했다. 사서 참고. 다

행히 7월 31일, 놀랍게도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1주일 만에 독도를 한국 영토로 교정했다. 그 전까지 한국과의 외교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해졌던 것에 비해 너무 쉽게 해결되었고,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그리 나서서 일처리가 된 건 드물다고 한다. 저 건이 진행 중일 때 한 개인이 나서서 움직이는데 정부는 뭐했냐며 크게 비난 받았고, 해외에 자국을 알리는데 정부가 크게 원조를 하지 않는 부분도 비판 받았다.

다만 조지 워커 부시 전 대통령이 독도 분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확률은 매우 낮다. 본인이 치르는 전쟁들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판국에. 사실 이런 종류의 국제 분쟁은 세계적으로 많고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이라도 다 알기에는 무리가 있다. 2008년 8월에 FTA관련으로 한국에 방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상황이라 지시한 것을 가늠성이 크다.

이 사건은 한국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 독도 문제에 중립을 외치던 미국이 실재론 일본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라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 역시 이 사건에 대해 패배감을 느낀 듯하다.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이 반발한다고 그렇게 쉽게 한국 요구를 다 들어주냐?'라는 일본인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직 일본 외무성 관료 마고사키 우케루는 이 같은 미국의 조치에 일본 정부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던 것을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역사적 실수라고까지 규정하며 비판하고 있다.

사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방관하거나 침묵하는 선에서 끝나거나,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한국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는 일본을 점령했던 연합군 통합사령부 지침으로 인해 독도가 일본령에서 제외되었고, 통합사령부의 명령은 비가역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 후 일본국을 독립시켰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을 무효화한다면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역의 결과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된다.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역학구조가 극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기조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2012년 3월 22일 NYT(뉴욕타임즈)에서는 독도와 관련된 광고를 싣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미 국립지리원은 독도에 대해서 한국 영토임을 표시하고 있으며 독도를 부르는 다양한 표기(리앙쿠르 락스, 다케시마 등)에 대해서도 한국 영토를 가리키는 표현임을 명시하였다.

"세계 주요국 중, 이스라엘이 거의 유일하게 독도, 동해를 단독 표기하는 나

라"라는 소리가 있지만, 오류다. 이 얘기의 시초는 언론의 동해, 독도 표기를 조사하면서 한 기자가 각국의 주한대사관 홈페이지를 조사했던 것이다. 홈페이지에는 대사관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를 링크하는 게 보통인데 모든 대사관들이 구글 지도를 링크해 놓았다. 문제는 구글 지도의 경우 영문 구글로 접속하면 동해가 일본해로 되어있고 한글 구글로 접속하면 동해로 표기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대사관은 영문 구글 지도로 링크를 걸어 놔지만 이스라엘은 한글 구글로 링크를 걸어 놔고 기자는 이를 근거로 독도 동해 표기 통계를 내었고, 이 통계 자료가 많은 커뮤니티를 떠도는 바람에 사람들은 그렇게 믿게 되었다.

### 북한의 독도 관련 태세

북한은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불거지자, "(일본은) 독도에 있는 풀 한 포기도 밟지 말라."는 공식 논평을 내었다. 한국의 헌법으로 명시된 이북5도위원회처럼 북한도 헌법에 한반도 전체를 자기 나라의 영토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이 점거 중인 독도는 엄연히 자기네 영토이니까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독도를 일본으로부터 방어하려는 수준은 남한을 훨씬 뛰어넘는다.

그 외, 2004년 /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자체적으로 독도 우표를 발행하기도 했다. 링크 2014년판의 우표에서 2005년에 남한에서 표준화한 독도의 바위 명칭을 그대로 실은 점에 주목. (탕건바위/삼형제굴바위 등) 무명의 독도 바위 이름 생긴다

워낙 강력한 주장을 펼치는 북한인만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공동 한반도기에 독도가 빠진 것에 대해서 왜 뺐냐고 지적했다. 사실 올림픽 때 이것 말고도 위의 동영상처럼 개사해서 부르거나, 한국 단일팀 아이스하키 경기 때 북한 응원단에서는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로 응원하기도 했다.

## 4. 독도의 경제, 생태적 가치-노성민

### 4.1. 독도의 경제적 가치

#### 4.1.1. 독도 주변의 황금어장

독도 주위의 수역은 한류와 난류의 교차수역이기 때문에 플랑크톤이 풍부하며, 해저 암초에는 주로 다시마, 미역, 소라, 구렁이, 전복 등이 번식하고 있고, 부근의 바닷속에는 회유성 어족인 연어, 송어, 대구를 비롯한 명태, 꽂치, 오징어, 고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 4.1.2. 독도의 지하자원

독도에는 해안 심층수와 매탄하이드레이트와 같은 지하 천연자원이 있다. 해양 심층수는 수심 200m이하 지대의 바닷물을 일컫는 말인데 수온이 일정하고 세균 번식이 없어 식수, 식품, 의약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다. 메탄하이드레이트는 불을 붙이면 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과 물이 해저에서 높은 압력을 받아 형성된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연소 시 공해가 적어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매우 가치가 크다.

#### 4.1.3. 독도의 관광 산업

독도를 대상으로 한 관광산업이 점점 더 발달하고 있는데, 관광객 수가 점점 늘어나며 많은 돈이 사용되며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다.

### 4.2. 독도의 생태적 가치

#### 4.2.1. 화산 지형의 보고

독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전에 형성된 화산섬이다. 다양한 암석, 지형, 지질 경관이 있기 때문에 해저 화산의 형성과 진화 과정들을 살펴볼 수 있는 세계적인 지질 유적으로 손꼽히고 있다.

#### 4.2.2. 생태계의 보고

불리한 생태 환경에도 불구하고 독도에는 다양한 희귀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철새들의 중간 피난처 및 휴식처를 제공함으로써 철새들의 종족 보존에 큰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하다. 독도에는 팽이갈매기, 습새 등의 천연기념물을 포함하여 100여 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는데, 이런 독도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천연 보호 구역 및 특정 도서로 선정되었다.

## 5. 독도의 정치적 가치-이준호

정치적으로 독도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자. 일본 정치인들은 독도 문제에 대해 다케시마의 날을 홍보하는 등과 같은 활동으로 대응하는 반면에, 대한민국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정치인들의 통일된 태도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태도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니 더욱 망언의 강도가 세지는 듯 하다. 우선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과 행동들을 살펴보자.

1986년 9월 한일외상회담에서 구리나리 외상,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문제를 제기한다.”

1996년 9월 30일 일본 자민당의 총선 공약, “독도는 일본영토임을 모든 기회를 동원해 한국측에 주장한다.”

1996년 10월 22일 외무성 하시모토 히로시 대변인, “다케시마는 우리의 영토며, 이같은 사실은 변함이 없다.”

1996년 일본 자민당 외교조사회, “다케시마는 틀림없는 일본 영토,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설정 때 다케시마가 한국 수역에 포함돼서는 안된다.”

2000년 9월 21일 모리 요시로 총리의 KBS 인터뷰 中,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

2001년 2월 27일 시마네현 스미타 노부요시 지사,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이자 시마네현 5개촌에 속해 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일본의 시마네 현 의회는 2005년 3월 16일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였다. 일본의 마쓰에 시에서 열린 ‘다케시마의 행사’

스가 요시히데,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다.”

일본 총리 아베 “침략에 대한 정의는 학계적으로 분명하지 않다.”, 다케시마의 날을 기념한 포스터 제작 및 배포함.

여러 일본 내각 관료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 “독도는 일본땅”

이와 같은 행동들을 보아 일본의 정치인이 독도에 대한 망언과 행동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치인의 경우는 너무나도 다르다. 2010년 11월 이명박이 모리 요시로 전 일본 총리에게 수교 훈장 중 최고등급인 광화대장을

수여했다. 모리 요시로는 훈장 받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일제 침략 전쟁 미화 발언을 했던 다케시타 노보루, 독도 망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스즈키 젠코,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이자 A급 전범으로 독도 망언을 일삼았던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가 정부로부터 수교 훈장을 받았다. 우리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일본인들 가운데 독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일본 정치인이 12명이나 포함되었다. 사과하고 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것이 말도 안되는 짓이다. 물론 이와 같은 사례는 극히 일부이다. 대한민국 정치인들 또한 ‘독도는 우리땅’이라며 독도에 대한 입장을 표현하고 있다. 우선 대한민국 국민의 대리인인 정치인들이 국민의 염원인 독도 수호에 같은 의견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내에서도 통일되지 않는 의견으로 내세우면 일본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국제 사회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물론 이 사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일본이 독도에 대한 망언과 행동은 점차 과격 해져간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합심하여 독도 문제를 해결해보도록 했으면 좋겠다.

둘째, 현재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독도를 까먹은 거 같다. 10월 25일, 독도의 날 때 순간 관심이 높아지고 그 이후 독도에 대한 관심은 매우 빠른 속도로 사그라들었다. 독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으면 눈 뜨고 코 베인다는 속담처럼 최악의 상황으로는 갑자기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를 일본에게 내어주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 대한민국 정치는 진보와 보수로 진영이 나뉘어, 서로를 혈투를 생각만 한다. 서로 정책에 대해 문제를 일삼고 어떠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물론 최저임금 문제, 댓글 조작 사건 등 매우 중요하지만 독도 문제는 국가적 문제이지,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내정의 혼란으로 인해 외세가 우리나라를 빼앗을 수는 없다. 어서 빨리 정치인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국민에게 독도의 관심을 유발하도록 노력하고, 일본과 독도 문제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국민에게 독도의 관심을 유발하는 데 최근에 좋은 예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다. 국빈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다. 이때 식사 중 독도 새우로 만든 잡채 요리가 나왔다. 독도 새우를 요리로 만듦으로써 국민에게 독도의 관심을 유발하게 된 매우 좋은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으로는 이순신 장군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인용하고 싶다. 일단 우리가 독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

가? 지금보다 정부와 학계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역사적 사료 연구를 더욱 강화하여 일본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국제적 홍보 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지금보다 더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 6. 참고문헌

경상북도 사이버 독도. 한눈에 보는 독도 연표. Retrieved August 15. 2018.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dokdo.go.kr/images/s02/img\\_mapkorea\\_b.jpg](http://www.dokdo.go.kr/images/s02/img_mapkorea_b.jpg)

외교부 독도. 우리 영토인 근거. Retrieved August 15. 2018. from the World Wide Web: <http://dokdo.mofa.go.kr/kor/dokdo/reason.jsp?q=1>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려시대. Retrieved August 15. 2018. from the World Wide Web: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616597&cid=51936&categoryId=54503>

신태영 (2012). 지철로왕. Retrieved August 15. 2018. from the World Wide Web: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633578&cid=62146&categoryId=62146>

한국인문고전연구소 (2012). 지증 마립간. Retrieved August 15. 2018. from the World Wide Web: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642686&categoryId=49615&id=49615>

국사편찬위원회.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2월 8일 을축 1번째기사 여러 신하들과 우산·무릉도 주민의 쇄출 문제를 논의하다. Retrieved August 15. 2018. from the World Wide Web: [http://sillok.history.go.kr/id/kca\\_11702008\\_001](http://sillok.history.go.kr/id/kca_11702008_001)

국사편찬위원회. 세종실록 153권, 지리지 강원도 삼척 도호부 울진현. Retrieved August 15. 2018. from the World Wide Web: [http://sillok.history.go.kr/id/kda\\_40009004\\_002](http://sillok.history.go.kr/id/kda_40009004_002)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 4월 7일 임술 1번째기사 검찰사

이규원을 소견하다. Retrieved August 15. 2018. from the World Wide Web: [http://sillok.history.go.kr/id/kza\\_11904007\\_001](http://sillok.history.go.kr/id/kza_11904007_001)

전충진 (2009). [여기는 독도] 역사③-조선 초기 정책. Retrieved August 15. 2018. from the World Wide Web: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8&aid=0000129289>

신용하. 독도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6포인트. Retrieved August 15. 2018.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hunet.co.kr/files/gold/lecture/dal30222113729.pdf>

유원모 (2018). 독도 존재 확신한 고종, 울릉도검찰사에 “눈으로 확인하라” 특명. Retrieved August 15. 2018. from the World Wide Web: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0&aid=0003138306>

국토지리정보원 독도지리넷. 역사. Retrieved August 15. 2018. from the World Wide Web: <http://dokdo.ngii.go.kr/dokdo/contents/contentsView.do?rbsIdx=44>

김범 (2012). 안용복. Retrieved August 15. 2018. from the World Wide Web: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74697&cid=59015&categoryId=59015>

두산백과. 맥아더라인. Retrieved August 15. 2018. from the World Wide Web: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92164&cid=40942&categoryId=31657>

외교부 독도. 독도에 대한 우리 입장. Retrieved August 15. 2018. from the World Wide Web: <http://dokdo.mofa.go.kr/kor/>

VOA 뉴스 (2018). “일본 ‘독도 영유권’ 강화한 외교청서 추진.. 한국 정부 강력 항의”. Retrieved August 15. 2018. from the World Wide Web: <https://www.voakorea.com/a/4394449.html>

뉴스1 (2018). “정부가 ‘독도는 일본땅’ 일본 외교청서에 강력히 항의했다.”. Retrieved August 15. 2018. from the World Wide Web: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afa39a1e4b09a94524b656e](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afa39a1e4b09a94524b656e)

위키리크스한국 (2018). 한-일 ‘독도 분쟁’을 바라보는 미국의 입장은... 대외적으로는 중립, 내심은 일본편?. Retrieved August 15. 2018.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16173>